

## 「中企 정책자금 효율적 운영 방안 수립을 위한 동향 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구분	내 용
<p>① 中企 경영 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 中企는 매출, 수출, 고용 모두 회복되고 있다고 체감</li> <li><b>매 출</b> : 응답 中企의 57.6%가 매출 변화 없음 또는 증가 예상, 평균 증감율 2.8% * 감소 응답비율 '21.1분기 조사 대비 28.9%p 감소(71.1%→42.2%), 평균증감률도 17.3p ↑ (△14.5%→+2.8%)</li> <li><b>수 출</b> : 응답 中企의 41.3%가 수출 감소 예상, 평균 증감률 △6.6% * 감소 응답비율 '21.1분기 조사 대비 28.9%p 감소(70.0%→41.1%), 평균증감률도 6.3%p ↑ (△12.9%→△6.6%)</li> <li><b>고 용</b> : 응답 中企의 76.0%가 고용 변화 없음 또는 증가 예상, 평균 증감률 7.1% * 감소 응답비율 '21.1분기 조사 대비 14.9%p 감소(38.9%→24.0%), 평균증감률도 10.2%p ↑ (△3.1%→+7.1%)</li> <li>· 업종별·지역별·수출유무에 따라 경기 회복 속도는 상이. 비대면 업종이 전통 제조업 대비, 수도권기업이 비수도권 대비, 수출기업이 내수기업 대비 양호 * 업종별 매출 : 비대면(정보처리(9.7%), 유통(10.1%)), 전통제조(화학(-3.2%), 식품(-2.2%)) - 전체 (2.8%) * 매출증가율 : 수도권(3.6%), 비수도권(2.2%) / 고용증가율 : 수출(9.6%), 내수기업(6.3%)</li> </ul>
<p>② 中企 자금 사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 中企의 절반 이상(57.9%)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고 응답 * 악화(57.9%)(다소악화(39.8%) + 매우악화(18.1%)), 비슷(32.4%), 호전(9.7%)(호전(8.9%) + 매우 호전(0.8%))</li> <li>·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판매 부진이 자금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 * 원부자재 가격 상승(39.2%), 판매부진(28.9%), 인건비 상승(16.2%), 주거대 은행 상환요구(13.1%)</li> </ul>
<p>③ 中企 자금수요 및 조달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中企 48.7% 시설투자 계획 有, 주요 투자목적은 생산성 향상(노후기계 교체) * 투자목적 : 생산성 향상(노후기계 교체)(51.4%), 납품물량 증가(22.9%), 디지털전환(10.2%) * 필요금액·조달방식 : 평균 13.3억, 정책자금(중진공) 선호(62.4%)</li> <li>· (운전) 中企 61.4% 운전자금 조달계획 有, 주요 조달 목적은 원자재 구입 * 조달목적 : 원부자재 구입(56.6%), 인건비(43.4%), 생산·부대비용(33.0%), 판로·시장개척비(32.7%) * 필요금액·조달방식 : 평균 4.5억, 정책자금(중진공) 선호(64.7%)</li> </ul>
<p>③ 정책자금 역할과 운용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中企 자금 조달시, 중진공 정책자금 가장 선호(77.3%), 낮은 대출금리가 선호요인 * 정책자금(중진공)(77.3%), 신·기보(13.1%), 이차보전(5.0%), 전환사채(3.6%) 순으로 선호 * 선호요인 : 낮은 대출금리(61.4%), 장기 대출기간(17.1%), 기술·사업성 평가(9.9%), 신용대출(5.2%)</li> <li>· 정책자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고용창출 및 유지기업 지원이라고 응답 * 고용창출·유지기업 지원(56.7%), 긴급 유동성 지원(16.7%), 전통제조업 지원(11.3%)</li> <li>· 中企 대부분(94.0%), 정책자금 중장기·연속 지원 방식 도입 선호 * 향후 3년간 지원가능한 대출한도 및 경영목표 설정 후 경영목표 달성률에 따라 자금지원</li> </ul>
<p>⑤ 정책적 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 中企는 매출, 수출, 고용 부분에서 회복되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으나, 업종·지역별·수출여부에 따라 회복속도가 상이함에 따라 정책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필요 ①전통제조업 등 취약부문 대상 유동성 확보를 지원함과 동시에 ②사업 구조전환 지원 등을 통한 유망 신산업 육성 강화</li> <li>· 응답 中企의 10곳 중 6곳은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으며, 원부자재 가격상승이 주요 악화 원인으로, 경영애로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확대 지원 필요</li> <li>· 응답 中企의 절반은 생산성 향상과 디지털화 전환 등을 위한 시설투자 계획이 있었으며, 신규 시장 개척(32.7%)과 연구개발(24.7%)등을 위한 운전자금 수요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어, 중소기업 신산업 진출 및 디지털화 전환 지원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 강화 필요</li> <li>· 고용창출, 수출 등 경영목표를 달성한 기업 대상 정책자금을 중장기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혁신 중소기업으로 육성</li> </ul>

# 01

## 중소 정책자금 효율적 운용 방안 수립을 위한 동향 조사 개요

### ○ 조사 목적

- 중소기업 경영현황 및 자금조달 수요 등 현장의견과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지원 대책 수립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 조사 개요

구 분	주요내용
조사대상	◆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기업 3,000개사('21년)
조사기간	◆ '22. 02월 10일(목) ~ 02월 15일(화)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유선 및 SMS, E-mail 등 조사
표본크기	◆ 유효응답 기준 503개
표본오차	◆ 전체 95% 신뢰수준에서 ±4.37%p

### ○ 조사 내용

구 분	주요내용
중소 경영현황 및 자금 사정	◆ 중소기업 경영현황(매출, 수출, 고용) ◆ 자금 조달 사정, 조달 계획, 목적, 방법 규모
정책자금 역할	◆ 중소기업 선호 정책금융 지원방식 ◆ 중소기업 정책자금 역할과 장점
정책자금 금리	◆ 시중은행 대출금 평균 금리 및 정책자금 기준 금리 적정성 ◆ 금리 상승시 정책자금 사용의향, 활용 사유
정책자금 운용방식	◆ 정책자금 충분여부, 3년 이내 운전자금 추가 신청여부 ◆ 경영목표 달성률에 따른 운전자금 장기지원 도입 필요 여부

### ○ 응답자 특성

구 분	업체수 (개)	비중 (%)	
전 체	503	100.0%	
지역	서울	76	15.1
	인천/경기	152	30.2
	강원	17	3.4
	대전/충청	53	10.5
	광주/전북/전남	55	10.9
	대구/경북	62	12.3
	부산/울산/경남	83	16.5
	제주	5	1.0

구 분		업체수 (개)	비중 (%)
매출액 (21년도)	5억 미만	120	23.9
	10억 미만	80	15.9
	50억 미만	193	38.4
	100억 미만	69	13.7
	300억 미만	34	6.8
	300억 이상	7	1.4
종업원 수	5인 미만	161	32.0
	10인 미만	148	29.4
	50인 미만	174	34.6
	100인 미만	16	3.2
	100인 이상	4	0.8
업종 대분류	금속	57	11.3
	기계	80	15.9
	화학	42	8.3
	전기/전자	40	8.0
	섬유	22	4.4
	식품	38	7.6
	정보처리	36	7.2
	유통	82	16.3
	기타 제조	48	9.5
	기타 서비스	58	11.5
내수/수출	내수기업	390	77.5
	수출기업	113	22.5
업력 구분	1년 미만	15	3.0
	1~3년 미만	81	16.1
	3~5년 미만	91	18.1
	5~7년 미만	59	11.7
	7~10년 미만	73	14.5
	10~15년 미만	77	15.3
	15~20년 미만	50	9.9
	20년 이상	57	11.3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5억 미만	223	44.3
	10억 미만	103	20.5
	20억 미만	79	15.7
	30억 미만	34	6.8
	50억 미만	35	7.0
	50억 이상	29	5.8

# 02

## 중소 정책자금 효율적 운용방안 수립을 위한 동향 조사 세부 내용

### 1 중소기업 동향

#### 1] 응답 중소기업 57.6%가 매출액 변화없음 또는 증가, 평균 증감율 2.8%

- 응답 중소기업의 57.6%는 매출이 변화 없거나 증가했으며, 평균 증감율\*은 +2.8%로 조사됨
  - \* 중소기업이 응답한 매출액 변동률(증가·감소율)을 가중 평균한 값
  - 응답률은 “매출감소(42.2%)”, “변화없음(29.3%)”, “매출 증가(28.3%)” 순
  - 매출 증가 사유는 수요증가에 따른 수주 물량 증가, 수출 등 거래처 다변화 노력, 신규사업 추가, 코로나 호황 업종 등으로 조사됨
- '21.1분기 조사 대비 매출감소 응답비율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평균 증감률도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 매출감소 응답비율은 '21.1분기 조사 대비 28.9p(71.1%→42.2%) 감소하고, 평균증감률도 17.3%p 상승하여,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14.5%→ 2.8%)

매출 감소 응답 비율 및 평균 증감률 (n=498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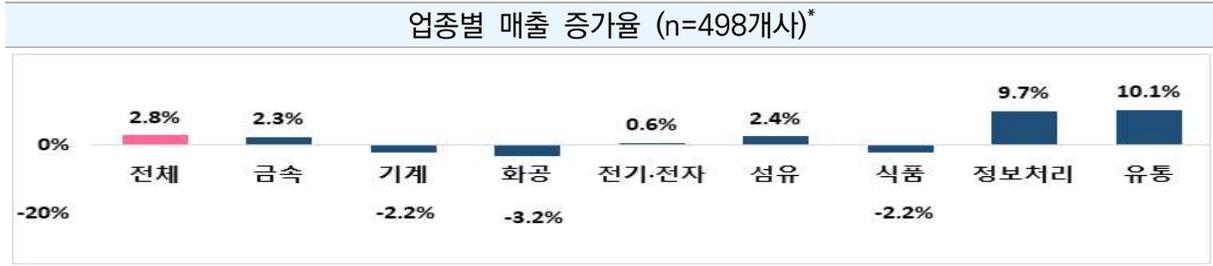


\* 전체 응답기업(503개사) 중 매출 증가율 400% 이상 응답 기업(5개사)를 제외한 498개사

- 구간별로는 “변화없음”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이어서 “매출 증가(28.3%)”, “50% 이상 감소(11.2%)”, “30~50% 미만 감소(9.6%)”, “20~30% 미만 감소(7.8%)”, “10~20% 미만 감소(7.2%)” 순으로 응답
-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매출 증가율이 높아짐

\* 매출액 증감률 : 5억 미만(-5.0%), 10억 미만(-9.8%), 50억 미만(4.3%), 100억 미만(15.7%), 300억 미만(20.0%), 300억 이상(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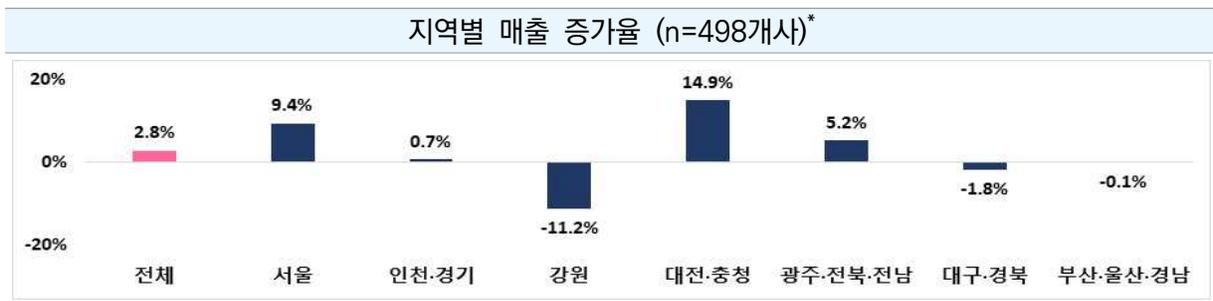
- 업종별로 정보처리(9.7%), 유통(10.1%) 등 비대면 관련 산업의 매출 증가율은 전체 평균(2.8%) 대비 높았으며, 화공, 식품, 기계 등 전통제조업은(-3.2%, -2.2%, -2.2%) 전체 대비 매출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전체 응답기업(503개사) 중 매출 증가율 400% 이상 응답 기업(5개사)를 제외한 498개사

- 지역별로 대전·충청(14.9%), 서울(9.4%) 지역의 매출 증가율이 전체 평균(2.8%) 대비 크게 높았으며, 수도권 매출 증가율이 3.6%로 비수도권 2.2% 대비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매출액 증감률 : 대전·충청(14.9%), 서울(9.4%), 광주·전북·전남(5.2%), 인천·경기(0.7%), 부산·울산·경남(-1.0%), 대구·경북(-1.8%) - 전체(2.8%)



\* 전체 응답기업(503개사) 중 매출 증가율 400% 이상 응답 기업(5개사)를 제외한 498개사

## ② 응답 중소기업 41.3%가 수출 감소, 평균 감소율 -6.6%

- 응답 중소기업의 41.3%는 수출이 감소했고, 평균 6.6%\* 감소한 것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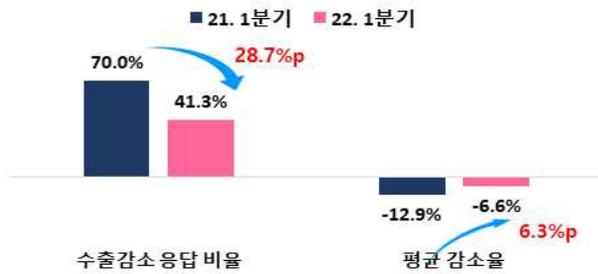
\* 중소기업이 응답한 수출액 변동률을 가중 평균한 값

- 다만, '21.1분기 조사 대비 수출 감소 응답비율과 평균 감소율 모두 축소되어, 수출 감소 추세 완화

- 수출 감소 응답비율은 '21.1분기 조사 대비 28.7%p(70.0%→41.3%), 평균 감소율도 6.3%p(-12.9%→-6.6%) 축소됨

- 수출 증가 주요 사유는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물량 증가, 판로개척 등 수출 다변화 노력, 비대면 수요 증가, 코로나 호황 업종 등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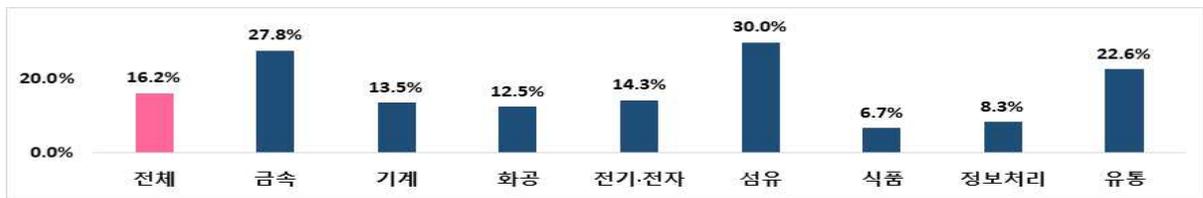
수출 감소 응답 비율 및 평균 감소율 (n=179개사)\*



\* 수출하고 있는 기업(180개사) 중 수출 증가율 400% 이상 응답 기업(1개사)를 제외한 179개사

- 구간별로는 “변화없음”이 42.5%로 가장 높았으며
- “50% 이상 감소(20.1%)”, “수출 증가(16.2%)”, “30~50% 미만 감소(6.1%)”, “20~30% 미만 감소(5.6%)”, “10% 미만 감소(5.0%)”, “10~20% 미만 감소(4.5%)”순으로 조사됨
- 업종별로 “수출증가 응답비율”은 섬유(30.0%), 금속(27.8%), 유통(22.6%), 전기·전자(14.3%), 기계(13.5%), 화공(12.5%), 정보처리(8.3%), 식품(6.7%) 순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16.2%) 대비 섬유·금속·유통 업종의 수출증가 응답 비율은 높았으며, 전기전자·기계·화공·식품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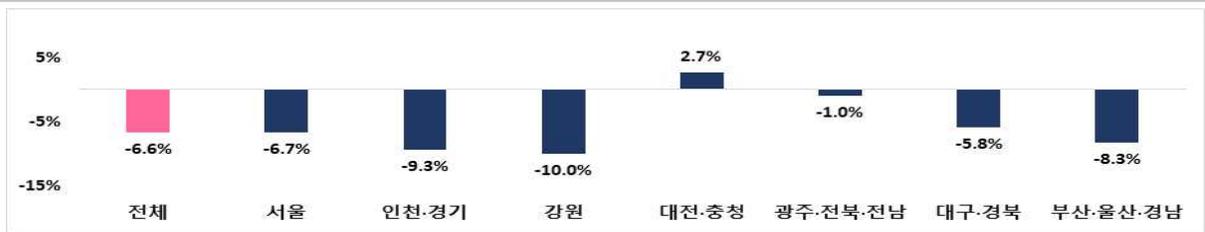
업종별 수출 증가 응답 비율 (n=179개사)\*



\* 수출하고 있는 기업(180개사) 중 수출 증가율 400% 이상 응답 기업(1개사)를 제외한 179개사

- 전체적으로 수출이 감소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대전·충청 지역은 수출이 2.7% 증가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충청권역의 지역주력산업인 바이오업종의 우수한 수출실적 영향인 것으로 판단됨
- 수출 증감율은 광주·전북·전남(-1.0%), 대구·경북(-5.8%), 서울(-6.7%), 부산·울산·경남(-8.3%), 인천·경기(-9.3%), 강원(-10.0%)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 수출 증가 응답 비율 (n=179개사)\*



\* 수출하고 있는 기업(180개사) 중 수출 증가율 400% 이상 응답 기업(1개사)를 제외한 179개사

### 3] 응답 中企 76.0%가 고용 변화 없음 또는 증가, 평균 증감을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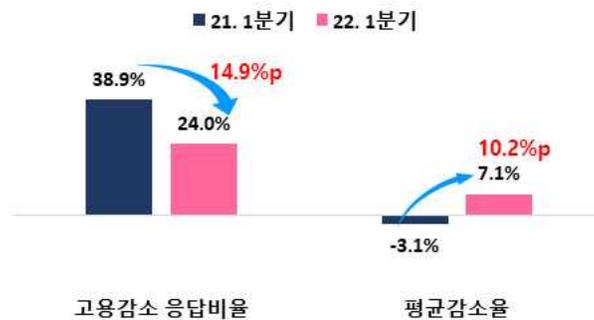
- 응답 中企의 10곳 중 7곳 이상은 고용 변화가 없거나(48.9%) 증가(27.1%) 했고, 평균 7.1%\* 증가한 것으로 응답

\* 中企가 응답한 고용 변동률을 가중 평균한 값

- '21.1분기 조사 대비 고용 응답비율과 평균 증감률도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고용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

- 고용감소 응답비율은 '21.1분기 대비 14.9%p(38.9%→24.0%) 감소하고, 평균증감률도 10.2%p 상승하여, 감소에서 증가로(-3.1% → 7.1%)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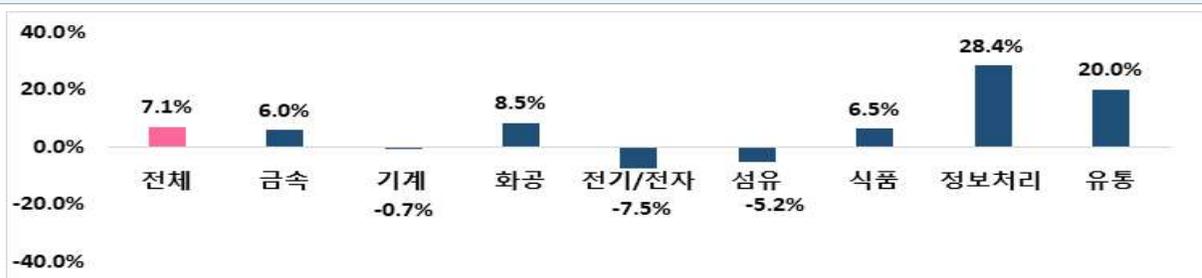
고용 감소 응답 비율 및 평균 감소율 (n=499개사)\*



\* 전체 응답기업(503개사) 중 고용 증가율 400% 이상 응답 기업(4개사)를 제외한 499개사

- 구간별로는 “변화없음”이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고용 증가(27.1%)”, “10% 미만 감소(6.0%)”, “50% 이상 감소(5.4%)”, “10~20% 미만 감소(4.8%)”, “30~50% 미만 감소(4.2%)”, “20~30% 미만 감소(3.6%)”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정보처리(28.4%), 유통(20.0%) 등 주로 IT 등 비대면 관련 업종의 고용 증가 응답비율이 전체 평균 대비(7.1%)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고용증가 사유는 매출증가, 사업 확장, 생산량 증가, 판로개척, 수출증가, 청년고용 지원정책 활용 등임

업종별 고용 증가율 (n=499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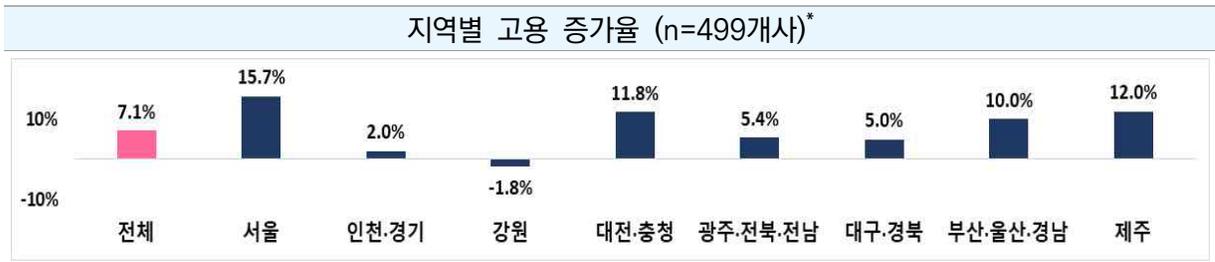


\* 전체 응답기업(503개사) 중 고용 증가율 400% 이상 응답 기업(4개사)를 제외한 499개사

-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충청, 부산·울산·경남 등 지역의 고용증가율도 전체 평균 대비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

\* 고용증가율 : 비수도권(7.6%), 수도권(6.5%)

- 지역별로 전국 평균(7.1%) 대비 높은 지역은 서울(15.7%), 대전·충청(11.8%), 부산·울산·경남(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기업(503개사) 중 고용 증가율 400% 이상 응답 기업(4개사)를 제외한 499개사

- 수출기업의 고용 증가율(9.6%)은 내수기업(6.3%)과 전체 평균(7.1%) 대비 높아, 수출기업이 내수기업 대비 고용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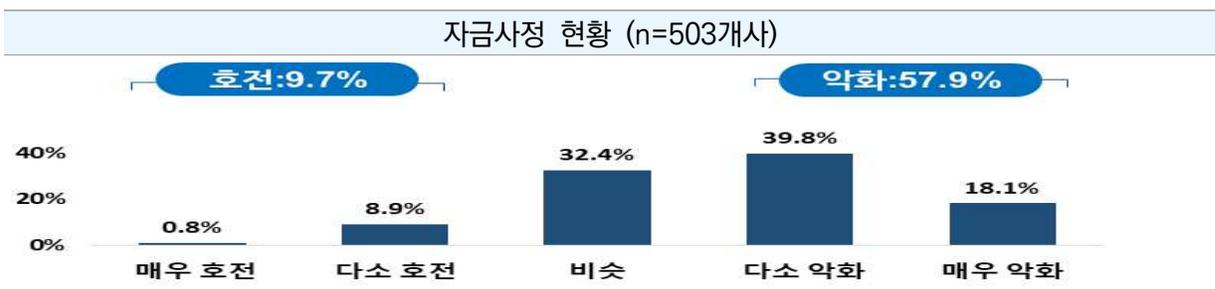


\* 전체 응답기업(503개사) 중 고용 증가율 400% 이상 응답 기업(4개사)를 제외한 499개사

## 2 中企 자금사정 및 조달계획

### 1 1 응답 中企 절반 이상(57.9%)이 자금사정 악화

- 응답 中企의 57.9%가 현재의 자금사정이 “악화된(매우 악화(18.1%) + 다소 악화(39.8%))”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비슷(32.4%)”, “호전(9.7%)(다소 호전(8.9%) + 매우 호전(0.8%))”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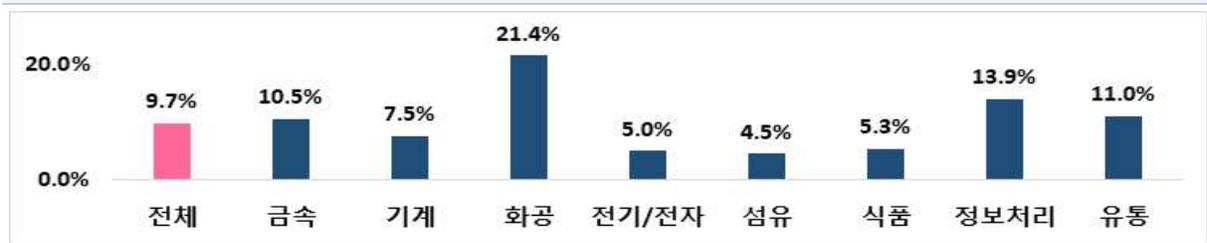
- 매출규모가 작을수록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매출규모가 커질수록 자금사정이 호전되었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매출액 50억 이상 업체의 경우 호전 응답비율이 14.0% 이상으로 전체(9.7%) 대비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

단위 : 개사, %

구분	사례수	① 매우 악화	② 다소 악화	③ 비슷	④ 다소 호전	⑤ 매우 호전	악화 (①+②)	호전 (④+⑤)	
전체	503	18.1	39.8	32.4	8.9	0.8	57.9	9.7	
매출액 ('21)	5억 미만	120	25.0	40.0	28.3	5.0	1.7	65.0	6.7
	10억 미만	80	27.5	30.0	31.3	11.3	0.0	57.5	11.3
	50억 미만	193	13.0	45.1	33.7	8.3	0.0	58.0	8.3
	100억 미만	69	17.4	37.7	30.4	11.6	2.9	55.1	14.5
	300억 미만	34	5.9	41.2	38.2	14.7	0.0	47.1	14.7
	300억 이상	7	0.0	14.3	71.4	14.3	0.0	14.3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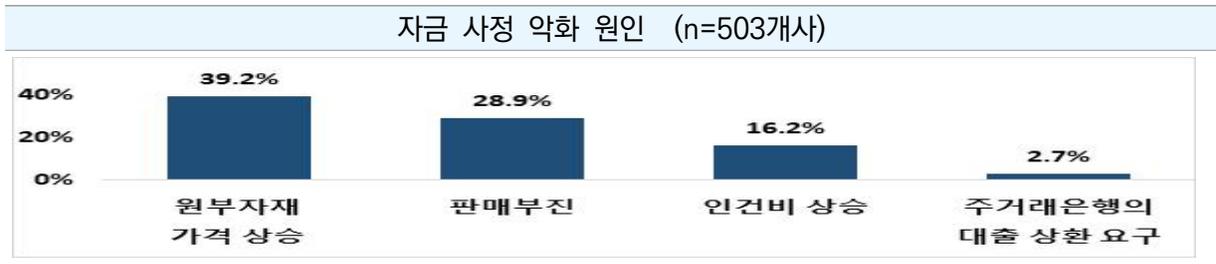
- 업종별로 자금사정 “호전” 응답 비율은 화공(21.4%), 정보처리(13.9%), 유통(11.0%), 금속(10.5%), 기계(7.5%), 식품(5.3%), 전기·전자(5.0%), 섬유(4.5%)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처리, 유통 등 비대면 관련 업종과 화학 등 2차전지 관련 업종 등의 자금 사정이 전체 평균(9.7%) 대비 양호했으며, 기계·식품·섬유 업종은 자금 사정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조사됨

업종별 자금사정 “호전” 응답 비율 (n=503개사)



## ②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 자금 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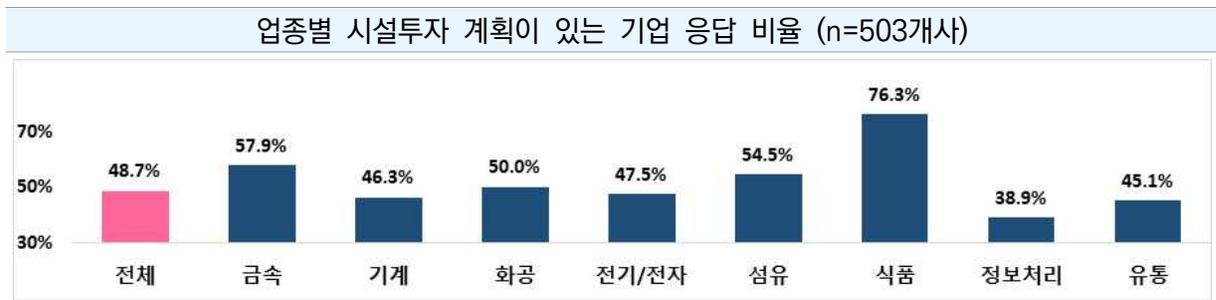
- 현재 자금 사정이 악화된 원인으로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이어서 “판매부진(28.9%)”, “인건비 상승(16.2%)”, “주거래 은행의 상환요구(2.7%)” 순으로 나타남



- (업종) 금속(64.5%), 섬유(62.5%) 업종의 원부자재 가격 상승 응답 비율은 전체 평균(39.2%) 대비 월등히 높아, 해당 업종이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전기·전자는 판매 부진(54.5%)을 자금사정 악화 원인으로 꼽아, 타 업종과 차이를 보임

### 3] 중소기업 절반 정도(48.7%)가 시설 투자 계획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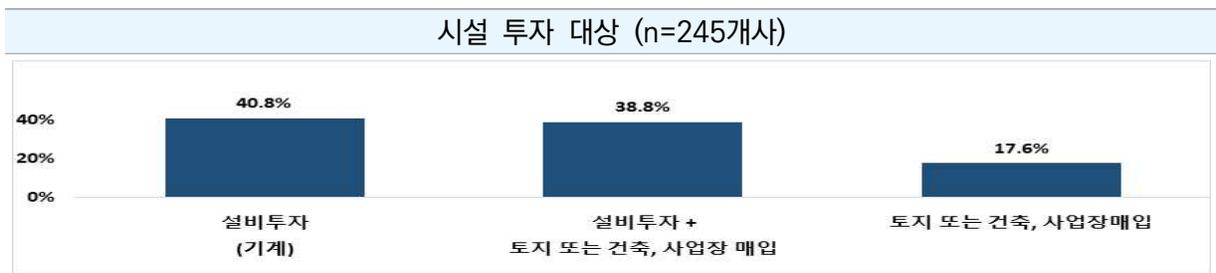
- 응답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48.7%)는 시설 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업종별로 식품(76.3%), 금속(57.9%), 섬유(54.5%), 화공(50.0%) 등 전통제조업의 시설투자 계획 응답 비율은 전체(48.7%)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업종의 시설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수출기업이 내수기업 대비, 비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기업 대비, 시설투자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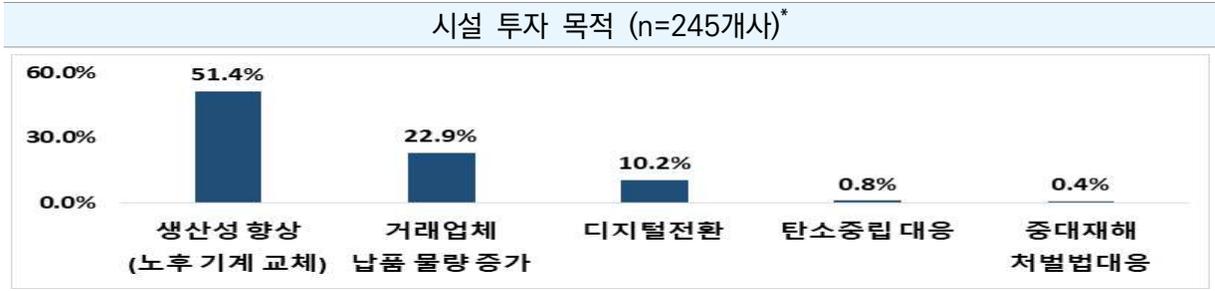
\* 시설 투자계획 응답비율 : 수출업(54.0%), 내수기업(47.2%) / 수도권기업(47.8%), 비수도권기업(49.5%)

- (시설 투자 대상) “설비투자(기계)(40.8%)”와 “설비투자+토지 또는 건축·사업장 매입(38.8%)”, “토지 또는 건축, 사업장 매입(17.6%)”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시설 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245개사

- 시설 투자 목적으로는 “생산성 향상(노후기계 교체)(51.4%)”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거래업체 납품 물량 증가(22.9%)”, “디지털 전환(자동화, 스마트팩토리 구축)(10.2%)”, “탄소중립 대응(0.8%)”, “중대재해처벌법 대응(0.4%)” 순으로 응답함
- 기타 응답으로는 신사업 등 사업확대, 사업장 확장(시설 증축, 물류창고 매입 등), 개발, 연구소 설비 투자, 사업전환, 판로 인프라 확대, 안정적 유통·재고 관리 등으로 조사됨



\* 시설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245개사

#### 4 시설 투자 필요금액 : 평균 13.3억

- 시설 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평균 투자 필요금액은 평균 13.3억으로 조사됨
- 시설 투자 필요 금액으로는 “5억 미만(39.6%)”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20억 미만(20.8%)”, “10억 미만(17.6%)”, “30억 미만(10.2%)”, “50억 이상(7.3%)”, “50억 미만(4.5%)” 순으로 나타남



\* 시설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245개사

- (지역) 기업당 시설투자 필요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전북·전남(16.8억 원), 부산·울산·경남(14.5억 원), 대전·충청(13.4억 원) 순

(단위 : 억원, 기업당 평균금액)

순위	지역	필요금액	순위	지역	필요금액
1	광주·전북·전남	16.8	5	대구·경북	12.9
2	부산·울산·경남	14.5	6	서울	12.4
3	대전·세종·충청	13.4	7	강원	7.5
4	인천·경기	13.1	8	제주	2.0

- (업종) 기업당 필요한 정책자금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기계(21.3억 원), 화공 (18.3억 원), 섬유(18.2억 원), 금속(14.2억 원) 순

(단위 : 억원, 기업당 평균금액)

연번	업종	필요금액	연번	업종	필요금액
1	기계	21.3	6	식품	10.6
2	화공	18.3	7	정보처리	9.4
3	섬유	18.2	8	기타 제조	9.0
4	금속	14.2	9	기타 서비스	8.9
5	전기·전자	14.0	10	유통	8.8

- (매출액) “5억원 미만”의 필요금액은 6.2억원, “10억 미만”은 15.9억원, “50억 미만”은 11.3억원, “100억미만”은 21.8억원, “300억 미만” 22.2억원, “300억 이상” 23.3억원으로 매출액 규모가 커질수록 시설투자 필요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단위 : 억원, 기업당 평균금액)

연번	매출규모	필요금액	연번	매출규모	필요금액
1	5억 미만	6.2	4	100억 미만	21.8
2	10억 미만	15.9	5	300억 미만	22.2
3	50억 미만	11.3	6	300억 이상	23.3

- (내수/수출) 수출기업의 시설투자 필요금액은 18.6억 원으로 내수기업(11.6억) 대비 높은 편

(단위: 억원, 기업당 평균금액)

연번	구분	필요금액(A)
1	전체	13.3
2	내수기업	11.6
3	수출기업	18.6

- (수도권/비수도권) 비수도권기업의 시설투자 필요금액은 13.7억 원으로 수도권 기업(12.9억) 대비 높은 편

(단위: 억원, 기업당 평균금액)

연번	구분	필요금액(A)
1	전체	13.3
2	비수도권기업	13.7
3	수도권기업	12.9

### 5 시설투자 자원 조달 방식으로 정책자금(중진공) 가장 선호 (62.4%)

- 시설 투자 조달 시 선호하는 방식으로는 “중진공 정책자금”이 62.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시중은행 대출+보증기관(기·신보 등)(14.3%)”, “시중은행 대출(10.6%)”, “자체자금(6.1%)”, “투자유치 또는 회사채(5.3%)”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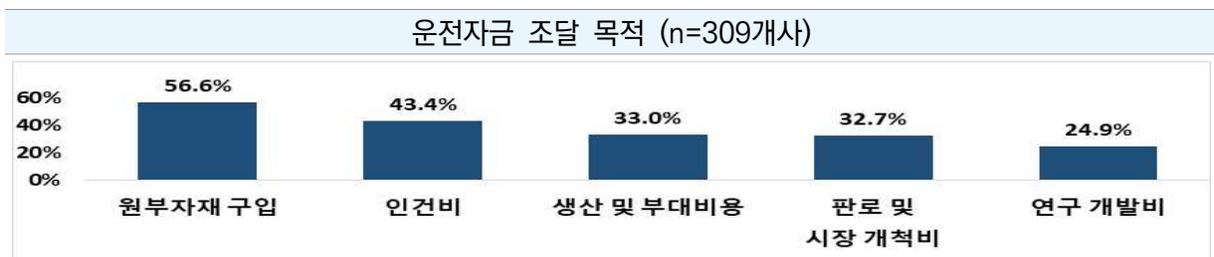
\* 시설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245개사

### 6 중소기업 10곳 중 6곳 (61.4%)은 운전자금 조달 계획 있음

- 응답 중소기업의 10곳 중 6곳 이상(61.4%)은 운전자금 조달 계획이 있었으며, 시설투자 수요(48.7%) 대비 응답 비율이 높은 편임
  - 또한, 수출기업이 내수기업 대비, 비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기업 대비 운전자금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운전자금 조달계획 응답비율 : 수출기업(66.4%), 내수기업(60.0%) / 수도권기업(62.3%), 비수도권기업(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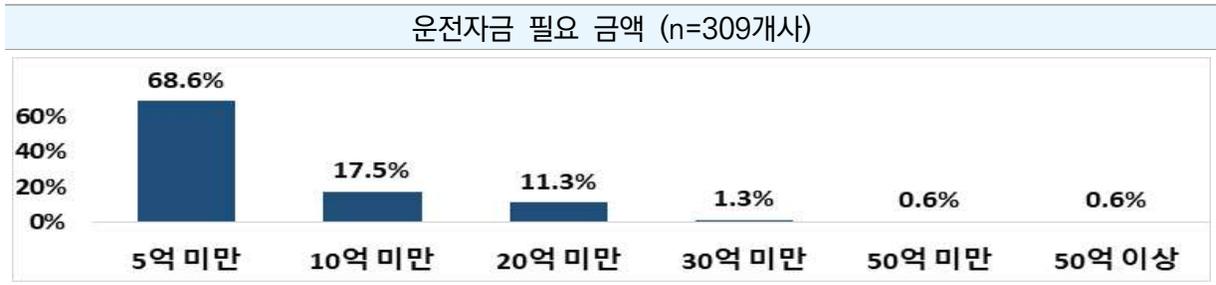
- 운전자금 조달목적으로는 “원부자재 구입(56.6%)”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인건비(43.4%)”, “생산 및 부대비용(33.3%)”, “판로 및 시장 개척비(32.7%)”, “연구·개발비(24.9%)” 순으로 나타남



\* 운전자금 조달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309개사

### 7 운전자금 필요금액 : 평균 4.5억

- (총괄) 운전자금 필요금액은 평균 4.5억으로 조사됨
  - 운전자금 필요 금액으로는 “5억 미만(68.6%)”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10억 미만(17.5%)”, “20억 미만(11.3%)”, “30억 미만(1.3%)”, “50억 미만(0.6%)”, “50억 이상(0.6%)” 순으로 나타남



\* 운전자금 조달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309개사

- (지역) 기업당 운전자금 필요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울산·경남(6.7억 원), 서울(6.2억 원), 강원(4.9억 원)

(단위 : 억원, 기업당 평균금액)

연번	지역	필요금액	연번	지역	필요금액
1	부산·울산·경남	6.7	5	대전·세종·충청	3.8
2	서울	6.2	6	대구·경북	3.7
3	강원	4.9	7	인천·경기	3.4
4	광주·전북·전남	3.9	8	제주	2.0

- (업종) 기업당 필요한 정책자금이 가장 높은 업종은 식품(7.3억 원), 기계(5.9억 원), 정보처리(5.4억 원) 순

(단위 : 억원, 기업당 평균금액)

연번	업종	필요금액	연번	업종	필요금액
1	식품	7.3	6	화공	4.2
2	기계	5.9	7	유통	3.8
3	정보처리	5.4	8	기타서비스	3.5
4	전기·전자	5.3	9	금속	3.2
5	섬유	5.0	10	기타제조	2.6

- (매출액) “5억 미만”의 필요금액은 3.1억 원, “10억 미만”은 2.3억 원, “50억 미만”은 4.4억 원, “100억 미만”은 5.8억 원, “300억 미만” 11.3억 원으로 매출액 규모가 커질수록 운전자금 필요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단위 : 억원, 기업당 평균금액)

연번	매출규모	필요금액	연번	매출규모	필요금액
1	5억 미만	3.1	4	100억 미만	5.8
2	10억 미만	2.3	5	300억 미만	11.3
3	50억 미만	4.4	6	300억 이상	11.0

- (내수/수출) 수출기업의 운전자금 필요금액은 6.1억원으로 내수기업(4.0억) 대비 높은 편으로, 수출기업이 내수기업 대비 운전자금 소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단위: 억원, 기업당 평균금액)

연번	구분	필요금액(A)
1	전체	4.5
2	내수기업	4.0
3	수출기업	6.1

- (수도권/비수도권) 비수도권기업의 운전자금 필요금액은 4.8억 원으로 수도권 기업(4.2억) 대비 높은 편  
(단위: 억원, 기업당 평균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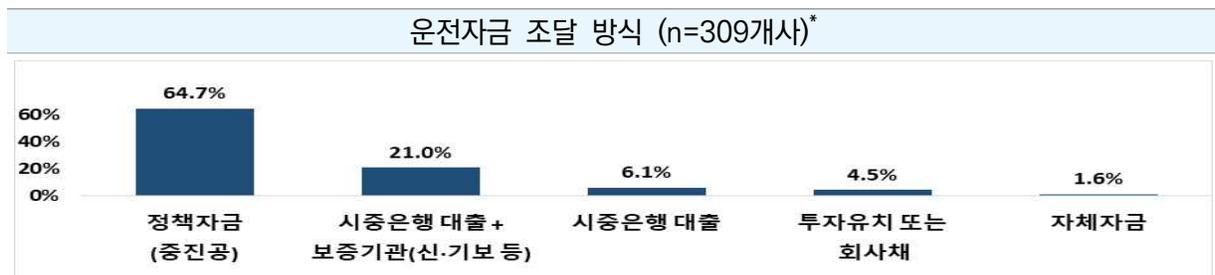
연번	구분	필요금액(A)
1	전체	4.5
2	비수도권기업	4.8
3	수도권기업	4.2

- (업력) 업력 7년 이내 기업에서는 업력이 높아질수록 운전자금 필요금액이 증가했으나, 업력 7년 이상에서는 필요금액이 다소 감소 추세  
(단위 : 억원, 기업당 평균금액)

연번	업력	필요금액	연번	매출규모	필요금액
1	1년 미만	2.6	5	7-10년 미만	5.5
2	1-3년 미만	3.4	6	10-15년 미만	4.1
3	3-5년 미만	4.4	7	15-20년 미만	4.9
4	5-7년 미만	6.6	8	20년 이상	4.3

### ⑧ 운전자금 조달 방식 : 정책자금(중진공) 선호 (64.7%)

- 운전자금 조달 시 선호하는 방식으로는 “중진공 정책자금”이 64.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시중은행 대출+보증기관(신·기보 등)(21.0%)”, “시중은행 대출(6.1%)”, “투자유치 또는 회사채(4.5%)”, “자체자금(1.6%)”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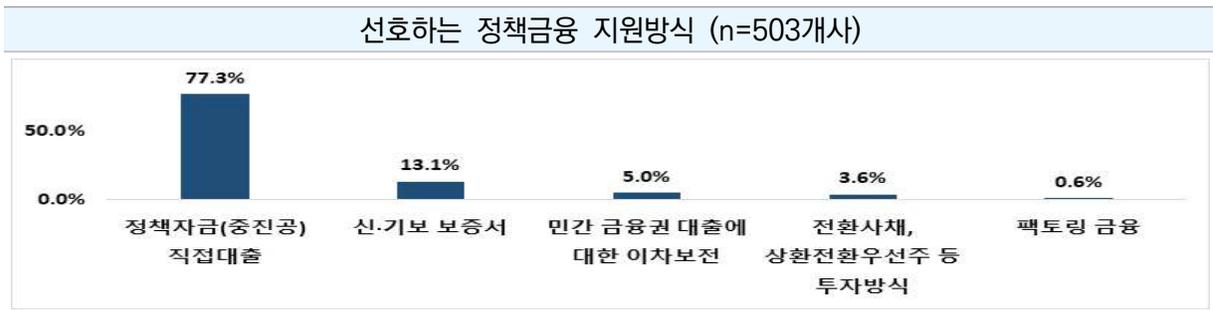


\* 운전자금 조달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309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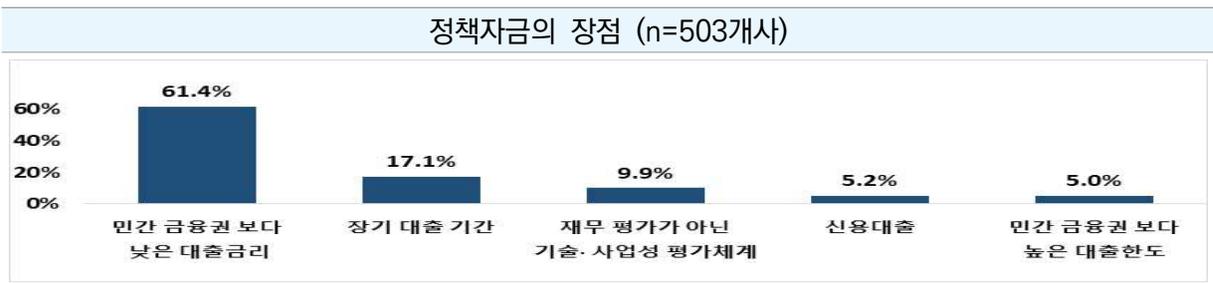
### 3 중진공 정책자금 역할

#### 1 중진공 정책자금 가장 선호하였으며, 낮은 대출금리가 선호요인(61.4%)

- 가장 선호하는 정책자금 금융 지원방식으로는 “중진공 정책자금”이 77.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신·기보 보증서(13.1%)”, “민간금융권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5.0%)”,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 등 투자방식(3.6%)”, “팩토리 금융(0.6%)”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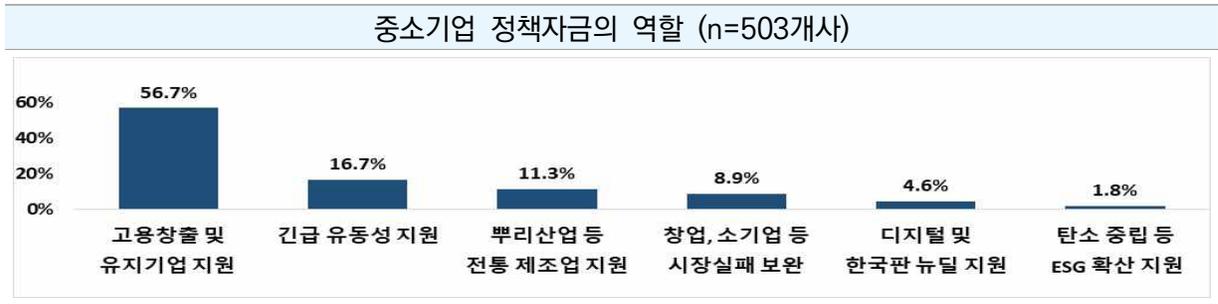


- 정책자금의 가장 큰 장점으로서는 “민간금융권 보다 낮은 대출금리(61.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장기 대출 기간(운전 5년, 시설 10년)(17.1%)”, “재무평가가 아닌 기술·사업성 평가체계(9.9%)”, “신용대출(5.2%)”, “민간금융권 보다 높은 대출한도(5.0%)” 등으로 조사됨



#### 2 중진공 정책자금 역할 : 고용창출 및 유지기업 지원(56.7%)

-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는 ①고용창출 및 유지기업 지원(56.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②긴급 유동성 지원(16.7%), ③뿌리산업 등 전통제조업 지원(11.3%), ④창업, 소기업 등 시장실패 보완(8.9%), ⑤디지털 및 한국판뉴딜 지원(4.6%), ⑥탄소중립 등 ESG 확산 지원(1.8%) 순으로 나타남 (1순위 기준)
- 1, 2순위 응답을 합한 결과는 1순위 기준과 거의 동일하나, “창업, 소기업 등 시장실패 보완(26.2%)” 응답 비율이 “뿌리산업 등 전통제조업 지원(22.3%)” 보다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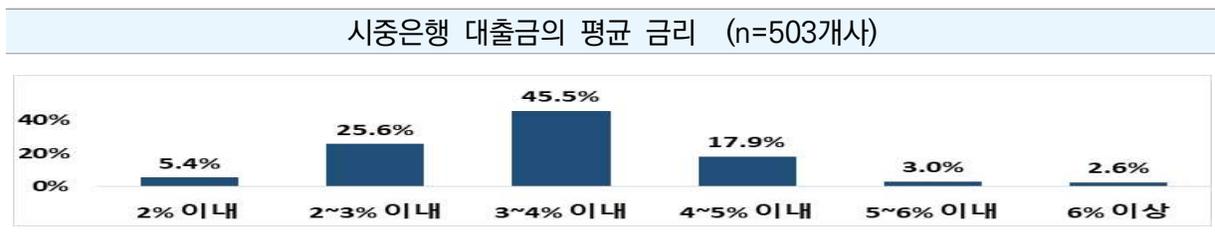
### ③ 응답 중소기업 68.2%는 특별 만기연장 조치가 도움이 되었으며, 제한 없는 특별 만기연장 선호

- 응답 중소기업의 68.2%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대출금 특별 만기연장 조치가 기업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매우 도움이 되었다 47.3% + 약간 도움이 되었다 20.9%)
  -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9.6%(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4.4%),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5.2%))에 불과함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출금 특별 만기연장 추가 시행시 중소기업 유동성과 자금 건전성 확보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는 ①제한 없는 특별 만기연장 (57.5%)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②선별적 특별 만기연장(일부자금, 매출액 10% 감소 등)(21.7%), ③기존 일반 만기연장 활용(1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4 정책자금 기준금리

### ① 시중은행 대출금 평균 금리 : 중소기업 45.4% 3~4% 이내, 평균 3.51%

-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중은행 대출금의 평균금리는 “3~4% 이내(45.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2~3% 이내(25.6%)”, “4~5% 이내(17.9%)”, “2% 이내(5.4%)”, “5~6% 이내(3.0%)”, “6% 이상(2.6%)” 순으로 나타남



### ② 중소기업 대부분 72.8%, 정책자금 기준금리(2.15%)가 적당하다고 응답

- 응답 중소기업의 대부분(72.8%)은 현재 정책자금 기준 금리가 적당하다고 응답 하였으며, 23.5%는 높다고, 3.8%는 낮다고 응답함

- 매출규모가 작을수록, 정책자금 기준 금리가 높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매출액 300억 이상 기업은 기준금리가 높다는 응답비율이 42.9%로 전체 (23.5%) 대비 월등히 높았음
  - 이는 담보를 확보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담보 대출 이율이 정책자금 기준 금리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됨

단위 : 개사, %

구 분	사례수	낮음	적당	높음	
전체	503	3.8	72.8	23.5	
매출액 ('21)	5억 미만	120	2.5	65.8	31.7
	10억 미만	80	5.0	72.5	22.5
	50억 미만	193	4.1	76.7	19.2
	100억 미만	69	1.4	72.5	26.1
	300억 미만	34	8.8	79.4	11.8
	300억 이상	7	0.0	57.1	42.9

### 3] 中企 92.0%, 정책자금 기준금리 0.3%p 상승해도 정책자금 사용 의향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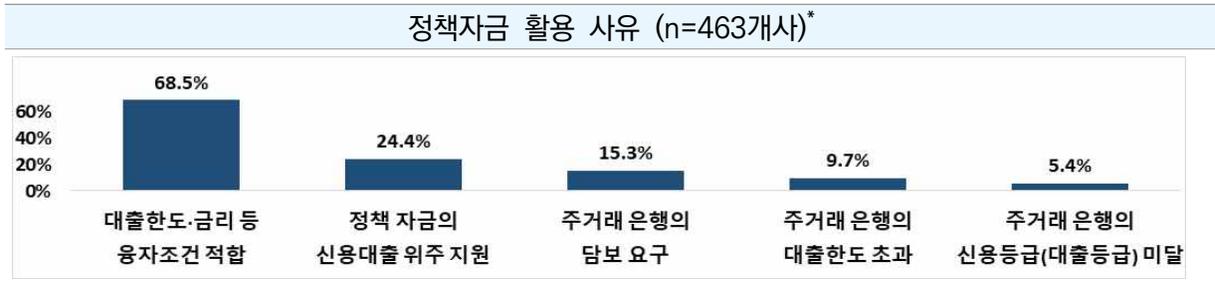
- 응답 中企의 92.0%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0.3%p 상승해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0%에 불과함
- 매출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정책자금 기준금리 상승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졌으며, 매출규모가 커질수록 기준금리가 상승해도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음
  - 이는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이자비용 상승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단위 : 개사, %

구 분	사례수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전체	503	92.0	8.0	
매출액 ('21)	5억 미만	120	87.5	12.5
	10억 미만	80	93.8	6.3
	50억 미만	193	93.8	6.2
	100억 미만	69	94.2	5.8
	300억 미만	34	94.1	5.9
	300억 이상	7	71.4	28.6

#### 4 정책자금 활용사유 : 中企 68.5%, 대출한도·금리 등 용자조건 적합

-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가 상승해도, 정책자금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①대출한도 및 금리 등 용자조건 적합(68.5%)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②정책자금의 신용대출 위주 지원(24.4%), ③주거래은행의 담보 요구(15.3%), ④주거래은행의 대출한도 초과(9.7%), ⑤주거래은행의 신용등급(대출등급) 미달(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정책자금 금리가 0.3%p 상승해도 정책자금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463개사

### 5 정책자금 운용 방식

#### 1 중진공 정책자금 충분 여부 및 부족금액

##### 1 정책자금 충분 여부

-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 56.1%는 정책자금이 “부족(매우부족 7.8% + 부족 48.3%)”했다고 응답했으며, 적정했다는 응답비율은 30.4%이며, 충분했다는 응답비율은 13.5%(충분 10.1% + 매우 충분3.4%)임
- 매출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매출규모가 커질수록 충분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았음

\* 정책자금 부족 응답비율 : 5억 미만(65.0%), 10억 미만(56.3%), 50억 미만(53.4%), 100억 미만(52.2%), 300억 미만(50.0%), 300억 이상(42.9%) 순

단위 : 개사, %

구분	사례수	① 매우 부족	② 부족	③ 적정	④ 충분	⑤ 매우 충분	부족 (①+②)	충분 (④+⑤)	
전체	503	7.8	48.3	30.4	10.1	3.4	56.1	13.5	
매출액 ('21)	5억 미만	120	11.7	53.3	25.0	9.2	0.8	65.0	10.0
	10억 미만	80	8.8	47.5	28.8	12.5	2.5	56.3	15.0
	50억 미만	193	5.2	48.2	33.2	9.8	3.6	53.4	13.5
	100억 미만	69	10.1	42.0	34.8	4.3	8.7	52.2	13.0
	300억 미만	34	2.9	47.1	29.4	20.6	0.0	50.0	20.6
	300억 이상	7	0.0	42.9	28.6	14.3	14.3	42.9	28.6

## ②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중 운전자금 추가 신청 여부

- 응답 中企의 절반 정도(47.5%)는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중 운전자금을 추가 신청하였다고 응답
- 매출액이 클수록 운전자금 추가 신청 수요가 많았으며, 이는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운전자금 수요가 높아짐을 반영

\* 운전자금 추가 신청 응답비율 : 5억 미만(36.7%), 10억 미만(42.5%), 50억 미만(50.8%), 100억 미만(56.5%), 300억 미만(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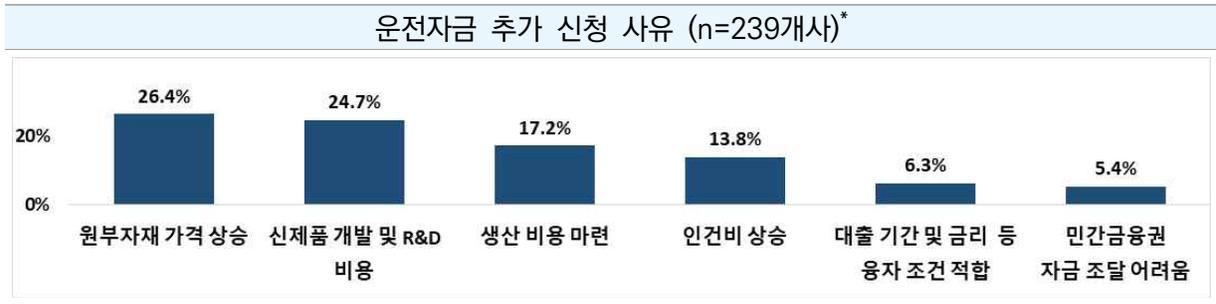
- (내수/수출) 수출기업의 운전자금 추가 신청 응답비율은 59.3%로 내수기업(44.1%)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비수도권) 비수도권의 운전자금 추가 신청 응답비율은 51.6%로 수도권 기업(42.5%)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개사, %

구 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503	47.5	52.5
매출액 (21)	5억 미만	36.7	63.3
	10억 미만	42.5	57.5
	50억 미만	50.8	49.2
	100억 미만	56.5	43.5
	300억 미만	61.8	38.2
	300억 이상	42.9	57.1
수출 여부	내수	44.1	55.9
	수출	59.3	40.7
지역	수도권	42.5	57.5
	비수도권	51.6	48.4

## ② 운전자금 추가 신청 사유 : 원부자재 가격 상승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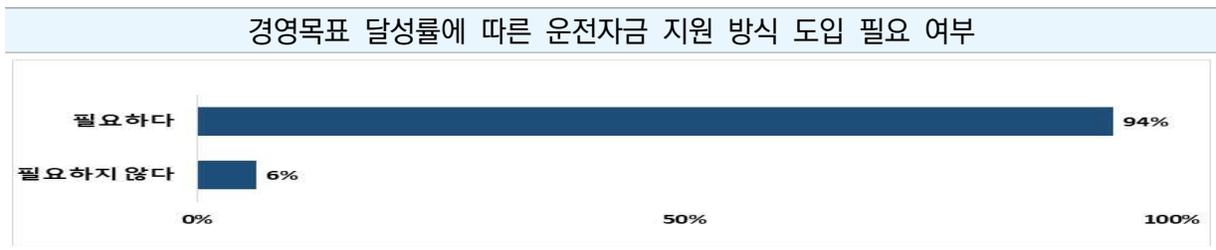
- 운전자금 추가 신청 사유로는 ①원부자재 가격 상승(26.4%)과 ②신제품 개발 및 R&D 비용(24.7%)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③생산비용 마련(17.2%), ④인건비 상승(13.8%), ⑤대출기간 및 금리 등 용자조건 적합(6.3%), ⑥민간 금융권 자금 조달 어려움(5.4%) 등으로 나타남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운전자금만 해당) 추가 신청했다고 응답한 기업 239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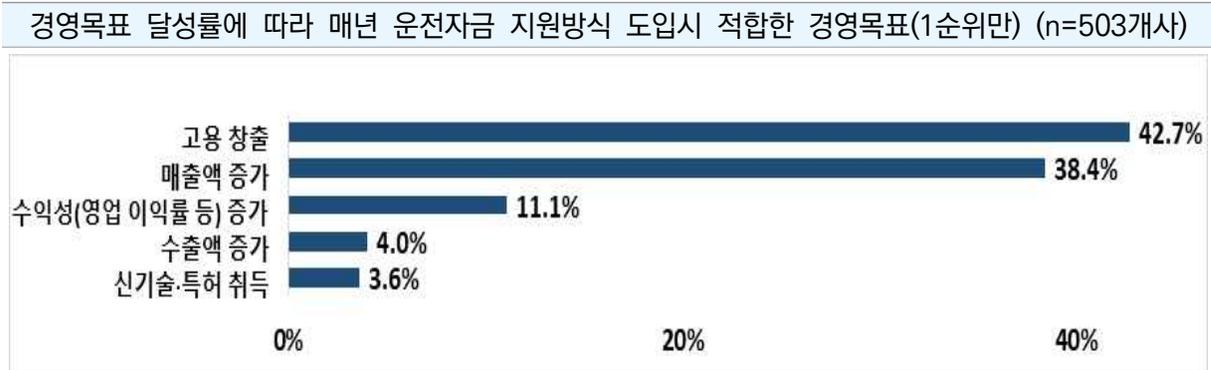
### ③ 中企 94.0% 경영목표 달성률에 따른 운전자금 장기 지원 도입 필요

- 응답 中企의 대부분(94.0%)은 향후 3년간 지원가능한 대출한도 및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경영목표 달성률에 따라 매년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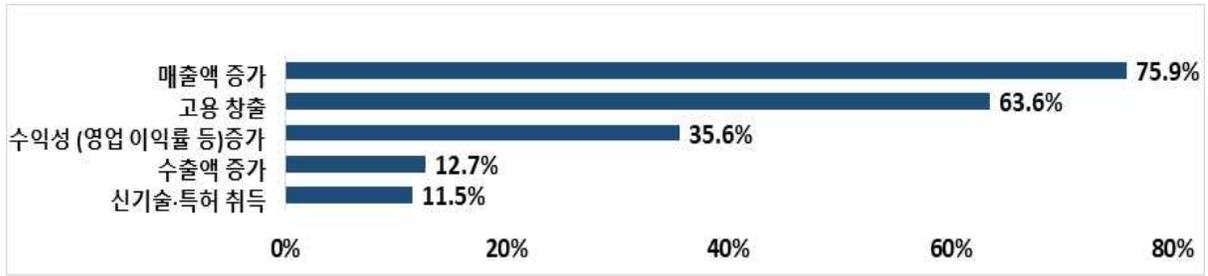
### ④ 적합한 경영목표 : 42.7% 고용창출

- 향후 3년간 지원가능한 대출한도 및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경영목표 달성률에 따라 매년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도입될 경우, 가장 적합한 경영목표의 1순위로는 “고용창출(42.7%)”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출액 증가(38.4%)”, “수익성(영업이익률 등)증가(11.1%)”, “수출액 증가(4.0%)”, “신기술·특허 취득(3.6%)” 등으로 나타남



-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기준으로는 “매출액 증가(75.9%)”가 가장 높았으며, “고용창출(63.6%)”, “수익성(영업이익률 등) 증가(35.6%)”, “수출액 증가(12.7%)”, “신기술·특허 취득(11.5%)” 순으로 나타남

경영목표 달성률에 따라 매년 운전자금 지원방식 도입시 적합한 경영목표(1+2순위) (n=503개사)



- (기업규모) 종업원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경영목표로 고용창출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종업원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매출액 증가 응답비율이 높았음

단위 : 개사, %

구 분	사례수	고용창출	매출액 증가	수익성 (영업이익률 등) 증가	수출액 증가	신기술·특허취득	기타	
전체	503	42.7	38.4	11.1	4.0	3.6	0.2	
종업원수 규모	5인 미만	161	38.5	41.0	12.4	3.7	4.3	0.0
	10인 미만	148	42.6	39.2	9.5	4.1	4.7	0.0
	50인 미만	174	45.4	36.8	12.1	3.4	1.7	0.6
	100인 미만	16	56.3	25.0	6.3	6.3	6.3	0.0
	100인 이상	4	50.0	25.0	0.0	25.0	0.0	0.0

## 03 정책적 시사점

### 1 취약 부문 유동성 지원과 유망 신산업 육성 지원 강화

- 응답 中企는 매출, 수출, 고용 측면에서 모두 회복되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었으나, 업종·지역·수출유무별 경기회복 속도가 상이함에 따라, 전통제조업 등 취약 부문 유동성 지원과 함께, 신산업으로 구조전환 등 유망 신산업 육성 지원 필요
  - 매출, 수출, 고용 모두 '21.1분기 조사 대비 평균 증감률\* 개선 추세
    - \* 평균 증감률: ('21.1분기) 매출(-14.5%), 수출(-12.9%), 고용(-3.1%) → ('22.1분기) 매출(2.8%), 수출(-6.6%), 고용(7.1%)
    - 업종별로 정보처리, 유통 등 비대면 관련 산업의 매출 및 고용증가율이 전체 평균 대비 높았으나, 섬유, 금속, 기계, 식품 등 전통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저조함
    - \* 매출증감률 : 유통(10.1%), 정보처리(9.7%), 섬유(2.4%), 금속(2.3%), 전기·전자(0.6%), 기계(-2.0%), 식품(-2.2%), 화공(-3.2%) - 전체 평균(2.8%)
    - \* 고용증감률 : 정보처리(28.4%), 유통(20.0%), 화공(8.5%), 식품(6.5%), 금속(6.0%), 기계(-0.7%), 섬유(-5.2%), 전기·전자(-7.5%) - 전체 평균(7.1%)
    - 지역별로 수도권 지역의 매출 증가율(3.6%)이 비수도권 대비(2.2%) 대비 높았으며, 수출기업의 고용 증가율(9.6%)이 전체 평균(7.1%) 대비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업종별·지역별에 따라 경기 회복 속도가 상이함에 따라 정책 수요자 특성에 따라 세분화되고 맞춤형 지원 정책 필요
    - 코로나19,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취약업종의 피해 극복을 위해 유동성 확보를 신속히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유망 신산업로의 전환과 구조혁신을 위한 수요 발굴, 진단, 기획, 정책자금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산업구조 변환 과정에서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전통제조업의 혁신을 지원함과 동시에, DNA(디지털·데이터·인공지능), BIG 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유망기업 집중 육성 필요

## 2 中企 자금 사정 악화에 따른 정책 지원 확대

### ○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어, 中企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자금 확대 검토 필요

- 응답 中企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57.9%)은 현재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원부자재 가격 상승(39.2%)과 판매 부진(28.9%)이 자금 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조사됨
-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판매 부진으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함께,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 정책지원 검토
- 실제로 '21년 中企의 은행권 대출잔액은 886조 4,000억원으로, 전년(804조 6,000억) 대비 10.2% 이상 증가한 가운데, 비은행권 대출잔액 또한 329조 7806억원으로 전년(251조 1,753억원) 대비 31.3%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정책자금 확대 지원 필요

\* 한국은행 금융동향, 경제통계시스템(비은행예금취급기관기업대출금)

## 3 정책목적성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자금 운영

### ○ 고용창출 및 수출기업 등 정책 목적성이 높고 현장 수요도 큰 분야 대상 정책 지원 확대

- 응답 中企는 정책자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긴급 유동성 지원과 전통제조업 지원 및 시장실패 보완 기능보다, 고용창출 및 유지기업 지원(56.7%)을 가장 많이 꼽아, 경영애로 기업 외에도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정책자금 역할 : 고용창출 및 유지기업 지원(56.7%), 긴급 유동성 지원(16.7%), 뿌리산업 등 전통 제조업 지원(11.3%), 창업, 소기업 등 시장실패 보완(8.9%)

- 또한, 수출기업이 내수기업 대비, 시설투자와 운전자금 수요가 높고, 평균 필요금액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수출기업 대상 예산 배분 확대와 지원 한도 확대 등 검토

\* 시설 투자계획·필요금액 : (수출)54.0%, (내수)47.2% / (수출)18.6억, (내수)11.6억

\* 운전자금 조달계획·필요금액 : (수출)66.4%, (내수)60.0% / (수출)6.1억, (내수)4.0억

#### 4 신산업 진출 및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 ○ 응답 中企의 절반은 생산성 향상과 디지털화 전환 등을 위한 시설투자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제조현장 스마트화·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강화 필요

- 응답 中企의 절반(48.7%)은 시설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시설투자 목적은 생산성 향상(노후기계 교체)(51.4%)과 거래업체 납품 물량 증가(22.9%), 디지털 전환(10.2%), 탄소중립 대응(0.8%) 등으로 조사됨
-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환경변화로 인해 산업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또한 이에 부합하는 구조혁신과 디지털 전환 등의 대응 필요성 증대
  - 중소기업의 기존 제품·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신사업 진출, 제조공정 스마트화 등을 위한 시설투입, 사업화(시제품제작 등)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필요
-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며, 노후기계 교체 등 제조혁신과 생산현장 디지털화 전환 등 지원 강화 필요

##### ○ 中企 신산업 진출 등 신규 투자 확대 기업 대상 정책 지원 강화

- 운전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원부자재 구입(56.6%), 인건비(43.4%)와 함께 판로 및 시장개척비(32.7%), 연구개발비(24.9%) 등의 응답도 높아, 이러한 수요에 기반하여, 신규시장 진출과 신제품 개발 등 신규투자를 확대하는 중소기업 대상 정책 지원 강화 필요

#### 5 정책자금 중·장기 연속 지원을 통한 혁신 중소기업 육성

##### ○ 고용창출, 수출 등 경영목표를 달성한 우수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을 중·장기 연속적으로 지원하여 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

- 응답 中企의 대부분(94.0%)은 대출한도 및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경영목표 달성률에 따라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정책자금의 중·장기 연속지원 방식에 대한 현장 수요는 높은 것으로 파악됨
- 가장 적합한 경영목표로는 고용창출(42.7%), 매출액 증가(38.4%), 수익성 증가(11.1%), 수출액 증가(4.0%), 신기술 개발(3.6%)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용창출 및 수출 등 경영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 필요

## 참고 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21.7.22.).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 관계부처 합동. (2021.7.23.).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
- 관계부처 합동. (2021.12.20.). 2022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1.). KOSME 中企 정책연구 리포트(2021-1), 「뉴뉴노멀 시대 한국판 뉴딜 대응을 위한 정책자금 기능 강화방안 연구」.
-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1.1.14.). 2020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
-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2.1.13.). 2021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업대출금. <https://ecos.bok.or.kr> (검색일: 2022.3.2.)

작성진

작성책임자 **정병욱** 정책연구실장

작성자 **양지애** 정책연구실 차장



**발행인** 김학도

**편집인** 정책연구실

**발행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52851)

전화 : 055-751-9273, 팩스 : 055-751-9411

홈페이지 : [www.kosmes.or.kr](http://www.kosmes.or.kr)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